

보도자료
총 25페이지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쟁기념관 앞)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수경)

기자회견 순서			
01	살인기업선정식 및 참석 단위 소개, 추모목념		
02	여는 발언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산재예방TF 단장	이수진(비례)
03	여는 발언②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04	□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순위 발표		
05	발언①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06	발언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07	□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발표		
08	발언③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09	발언④	쿠팡 과로사 노동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	박미숙
10	기자회견문 낭독	매일노동뉴스 대표	한계희
11	퍼포먼스		

자료 순서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P
2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5P
3	2023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9P
4	기자회견문	18P
5	발언문	20P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 추락·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 22년 1월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고자,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23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알리고자 합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진행 경과

-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 2023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경과는 아래의 순위발표 내용 참조

3).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명단

-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22	현대건설	- 2021년 6명의 노동자가 사망, 현대건설은 07년, 12년, 15년에 이어 4번째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뿐만 아니라 2015년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2005~2014년 산재사망 합산 결과 총 110명 사망)
2021	한익스프레스	- 2020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단 한 건의 사고로 3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함. 한익스프레스는 2008년에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산재 참사가 있었던 기업임.
2020	대우건설	- 2019년 한 해 동안 7명의 노동자가 질식, 깔림, 떨어짐 사고로 사망함. 당시 사망한 노동자 7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음. 대우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회나 선정된 대표적인 살

			인 기업임.
2019	포스코건설		- 2018년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 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2018	삼성중공업		-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칼	-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서울병원	-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 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건설업)현대건설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칼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 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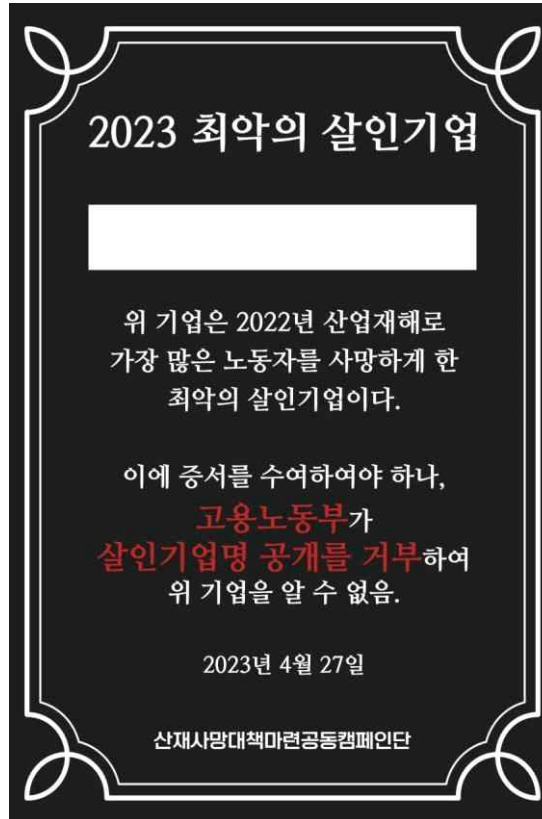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22	현대산업개발	- 광주 학동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개월 만에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과 시행 이후 지금까지 법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보완입법안을 제출하여 노동자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지워려 함.
2021	쿠팡	- 쿠팡은 2020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한 해 동안 16명이 과로로 사망한 한국 물류서비스업의 살인적 경쟁 속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
2020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선진경마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적폐경영과 그에 따른 갑질과 부조리로 부산에서만 14년간故문중원 열사를 비롯해 7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고용노동부	-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함. 9월 10일 경북 영덕의 오징어 젓갈 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는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함. 사업주를 관리 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제도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사용하도록 방치함.
2019	서부발전	- 2014~2018년 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중 서부발전이 7명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 10여 번의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하여 결국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보건복지부	-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일터 괴롭힘, 태움으로 인한 자살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의 과로사, 과로자살이

		이어지고 있음.
2018	우정사업본부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2017	교육부	-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우정사업본부	-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2016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 전염병 방지,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2015	-	-
2014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2013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2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1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2.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1) 2023 최악의 살인기업 : 선정할 수 없음



■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한 이래로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하에서도 산재사고사망자료(살인기업명단)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는 없었음. 하지만 올해 고용노동부는 기업명 및 기타 기본적인 정보 모두를 가린 자료를 제출해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

■ 지난 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취지인 “사업주, 법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재사고사망에 있어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산재사망정보 공개거부’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

■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따르면 법 제정으로 인해 과거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정보 공표에 대한 조항(13조)을 별도로 두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경감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게 노동부 입장을 공식적인 문서[하단 파일첨부]로 요청 및 당시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고용노동부 강검운 과장의 여야합의 발언에 대한 진위검토

-> 안호영 의원실 확인결과 고용노동부 직원이 의원실에 와 자료제출 범위를 설명한 적은 있으나 당시 야당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적 없다는 사실 확인.

□ 4월 21일 당시 산업안전본부장과 강은미 의원 만남 이후 고용노동부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로 요구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

□ 2022.04.22. 노동부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붙임) 2021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기업 현황 일부

□ 사망이 발생한 자료가 아니고, 원청 기업의 주소(사고발생현장 주소)가 누락되어 해당 기업이 발주하였거나 외주를 준 회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사망 일부 누락으로 대기업의 산재사망 책임소재를 분산시킬 위험이 있음

예시) 대기업 물류센터 현수막 공사 중 사망 노동자 1명 발생, 해당 물류센터 주소로 사망하였으나 적은 금액으로 발주한 공사라 해당 대기업 산재사망자에 미포함. 이후 주소 검색을 통해 해당 사고가 해당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실 발견 이에 순위 상승.

2021년 사고사망자 2명 이상 발생 기업 사망사고 현황

연번	지방청	대표지청	지방관서	업종	재해발생일	원청	하청	건설현장명	사망자 소속	사망 (명)	사고개요
1	대전청	청	천안	제조업	2021-01-05	휴먼이엔티㈜ 천안지점	-	-	원청	2	오토크레이브 설비에 콘크리트 덩크를 넣고 양상 중 뚜껑부분이 폭발
2	충부청	경기	경기	건설업	2021-06-19	효성중공업㈜	㈜성안건설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	하청	1	작업 중 벽체 철근이 전도되어 깔림
3	부산청	창원	제조업	2021-10-04	효성중공업㈜창원공장	-	-	원청	1	현장기 크레인을 전동유압호이스 드럼에는 적정 중량중기 크레인 (사우)이 사용됨을 확인하였으나 안전장치가 불량	
4	부산청	울산	제조업	2021-02-05	현대중공업㈜	-	-	원청	1	철관을 레버플러로 미세조정중 철관이 흘러내려 재해자 가격	
5	부산청	울산	제조업	2021-05-08	현대중공업㈜	가온기업	-	하청	1	탱크 용접 작업 중 떨어짐(추정)	

■ 2023년 고용노동부 산재사고사망 자료 제출 현황

□ 2023.04.20. 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 ① 산재사고사망 현황 자료 제출 거부 ② 2022년 제출한 2명 이상 사고사망 발생기업 자료 역시 하청기업 정보 은폐, 원청기업명 및 주소 감추기, 재해보고일 감추기

(붙임) 2022년 2명 이상 사고사망자 발생 기업 현황 일부

○ 2022년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

연번	구분	원청명	소재지	재해발생일	사망자수(원청)	사망자수(하청)
1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계 000(₩)	전북 김제시	2022-03-08	0	1
2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세종	2022-07-04	0	1
3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경기 성남시	2022-09-03	0	1
4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충 000	충북 음성군	2022-02-02	1	0
5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충북 음성군	2022-04-02	1	0
6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대 000(₩)	경남 거제시	2022-03-25	0	1
7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경남 거제시	2022-09-01	0	1
8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경남 거제시	2022-10-19	0	1

3)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자료 제출거부 사유로 제시한 공문

□ 2022.04.19. 강은미 의원이 요구하여 고용노동부 제출

중대재해 관련 자료 국회 제출 방안

□ 현재 상황

- '21.6.24.부터 일부 언론사에서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현황', '중대재해 사각지대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법인의 명예훼손 문제 등 제기
 - * ▲사업장명(원청, 하청, 개인사업자 성명) ▲재해발생일, 발생장소, 상세주소 ▲발생형태, 사고유형, 사고개요 ▲ 공사금액, 사고기인물 등

□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 * 개인정보: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공개법) 중대재해 조사는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수사활동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제9조)
 - * 중대재해 해당 여부, 법 위반 여부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재판 확정 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 어려움
 - 우리부 '산재발생 사업장명단 공표' 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표
- (피의사실 공표)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중대재해 발생 현황으로 피의사실 특정이 가능하므로 확정판결 전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 가능
 - * 피의자(사업장) 성명, 범죄시기(재해발생일), 범죄장소(재해발생지), 범죄사실(재해경위)

□ 제출 기준

-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제출
- (위원회 의결이 없는 경우) 중대재해 관련 자료' 제출시 재해자 성명, 사업장명 등 개인·개별기업 특정 가능 정보"는 삭제 후 제출
 - * 중대재해 발생현황,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등
 - ** 개인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재해자 성명, 주민번호, 상세 주소(발생장소 포함)
- 다만, 00전자, 00건설 등 기업명을 특정하여 제출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명을 명시하여 제출
 - ※ 위 사항 이외의 중대재해 관련 자료 제출은 의원실과 협의하여 제출

3. 2023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 선정 근거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법 개정 TF를 발족하는 등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은 형해화 되었고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 회피하고 축소 왜곡 시도하고, 노동자 과로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기업 책임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하는 산안법 개악 등을 추진하는 등 생명 안전 정책이 거둬 후퇴하고 있어 특별상을 수여함.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말말'

① 2021년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 조선비즈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② 2021년 7월 19일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실패한 정책이었다” || 매일경제

“기업 잘못은 개인 아닌 법인에 책임 물어야“

“기업 경영진에 대한 직접 사법처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

2021년 12월 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 || 한국일보



[출처 : 뉴스타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

“기업인에게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책임져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2021년 12월 2일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안양 도로포장 공사 현장 || 민중의소리

“너무 여처구니가 없다.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롤러차 운전기사의 과실인데 그런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충분히 교육하고 지휘감독해야 하고, 노동청에서도 그런 것이 제대로 교육이 됐는지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입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 운용에 있어서도 예방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 자체를 엄하게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

2022년 1월 14일

창원시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간담회 || 프레시안

“해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산업계 의견을 들어 (중대재해법 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

“일단 시행령 등으로 중대 산업 재해·사고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

2022년 2월 6일

광주 화정동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현장 || 조선일보

“(붕괴) 사진만 봐도, 어디 후진국이나 미개한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고 현장은 다른 경우보다 하청 단계가 많거나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지 않나 싶다. 원청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현장) 행위자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수사를 통해 책임규명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사고 경위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위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2021년 2월 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역 기자간담회 || 머니투데이

“법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쪽에서 적용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법당국의 수사 의지”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산업안전처벌법이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

로 하면 얼마든지 귀책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법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할 때 합리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굳이 폐기하거나 바꾸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인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면 경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중대재해법 없어도 형법에 과실치사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제가 수사하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자신 있다.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2022년 2월 12일

여천 NCC 폭발사고 이후 유가족 조문 || 연합뉴스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사를 촉구할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고 수사당국의 수사"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사고 경위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게 없다면 중대재해법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법은 정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귀책을 정확히 가려서 적용해야 한다"

2023년 3월 2일

대통령 후보 TV 토론 || 대한경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 현장을 가면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안된다"

"김용균 사건에 대해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했다"

"다만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와서 재판은 챙겨보지 못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게 안타깝다. 하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러한 산재사건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했다"

2022년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주요 경제단체장과 면담 || MBC



[사진 출처 : 대통령실]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경제단체장들 즉각 환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상속세 완화 등 기업규제 해소 강하게 건의)

2022년 7월 26일

법무부 업무 보고 || 월간조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

(언론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동훈 장관) "법을 제정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쌓이다보면 충분히 과태료라든가 다른 식의 과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위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좀 개선하자는 취지"

2022년 9월 27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희생자 합동분향소 || 대전일보

"과학수사의 역량을 발휘해 치밀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야 한다"

"이 비극이 어떻게 발생했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살펴 달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자 의무"

2022년 10월 20일

파리바게뜨 SPL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 || 서울신문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천을 돌려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서 이를 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

2022년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준비 계획 발표 || 노컷뉴스

(생략)

최근 20대 제빵 노동자, 건설 현장 50대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연이은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산업재해 대책의 핵심입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고를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2022년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 발표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핏빛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질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생략)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생략)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 경제5단체장 비공개 만찬 || 해럴드경제

“법 자체에 결함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형사처벌을 하려면 굉장히 명확해야 하는데, 중대재해법의 경우 법 자체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이 있어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

○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을 무력화 시켜왔던 윤석열 정부

- ▶ 지난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2022년 2월 대선 후보 시절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여천 NCC 폭발 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 현장을 찾아 유족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법에 따른 엄정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 ▶ 한편, 2021년 12월 경기도 안양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을 찾은 당시 윤석열 후보는 노동자가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사망했다며 고인과 유족을 조롱하는 망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빚음. 선거 운동 당시 재계를 만나는 자리에선 산재 피해 유가족들에게 말했던 입장과 180도 달리 ‘기업인 위축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사를 밝혀왔음
- ▶ 대통령 당선 직후 2022년 3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총, 전경련 등 6개 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하겠다는 입장 전달. 재계는 1호 건의 사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요구.
- ▶ 2022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완화 추진하는 범정부 TF 발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총 등 재계에서 요구해왔던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전문가 TF 운영 계획 포함.

- ▶ 정부 여당 국민의힘은 6월 10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주호영 등 중진급 이상 의원 10인이 경총 등 경영계가 주장해왔던 내용을 100% 수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 2022년 8월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법 개정 연구용역 진행하여 노동부에 개정 권고 내용 제시.
- ▶ 윤석열 정권은 꼼수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고자 했으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반대 투쟁, 파리바게뜨 SPL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10.29 이태원 참사로 전 사회적인 저항 여론에 부딪혀 지속 추진하지 못함.
- ▶ 2022년 11월 30일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핵심 내용은 △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없고 이전 정부에서 실패로 판명난 노사 자율안전 대책 △ 기업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과 징계 확대하는 대책 △ 중대재해 40%가 집중되는 건설업·하청 노동자·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대책 실종 등이었음
-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사, 검찰총장 출신임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음.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수식어 따라 다닐만큼 검찰/검찰 출신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검찰 권을 행사하고 있음. 2022년에만 250건에 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에서 노동부 기소 의견 송치는 34건, 검찰 기소는 14건에 불과함.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 삼포에 대해서는 1년을 넘게 끌다 지난 3월 31일에서야 기소. 2023년 4월 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만에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인 요진건설에 대해 법원은 최고 책임자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지청 내 수사·공소심의위원회도 항소포기 의견을 냈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음.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실행 판결이 난 한국제강 재판에서도 검찰은 최고책임자에 대해 고작 2년형을 구형함.
- ▶ 창사이래 47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법 시행이후에도 4건의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한 DL 이엔씨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중대재해는 검찰 기소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음. 법 시행 초기와 달리 노동부, 검찰의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수사 등이 실종되고 장기화 되면서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예방 노력 강화도 실종되고 있음.
- ▶ 2023년에도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는 본격화 될 것임. 올해 1월 전문가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 TF 발족하고 6월 개정안 발표하여 법 개악 추진 할 예정. 지난해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노동자/작업자가 안전수칙 등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징계, 해고 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화하고, 현장에서 횡행하던 ‘삼진아웃제’ 같은 노동자 일방 책임전가 규정을 더욱 확대 공고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악 추진도 본격 진행 될 것임.
- ▶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친기업, 노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기초 하에 생명 안전 정책은 거듭 후퇴 개악 되고 있음. 노동부 정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 가장 첫 번째 순위였던 중대재해 대책은

2022년 하반기 노동시간 개악 등에 밀리더니, 2023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책목표의 1순위는 <노동조합 개혁>이고, 중대재해는 3순위로 밀려났음.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효율성 평가가 들어오면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도입된 공공기관 안전평가 반영 평점은 3점에서 0.5점으로 대폭 삭감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은 유명무실해 지고 있음.

- ▶ 윤석열 정부는 가족과 한 달에 단 두 번 주말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시간마저 빼앗는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도로 위 시민안전을 팽개침.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이 법대로 주 52시간 준수와 안전작업 선언을 태업으로 물고 가 면허 취소, 징계를 남발하고 있음. 159명의 시민의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는 6개월이 넘어 가지만, 책임자 처벌은커녕 추모 분향소 설치조차 막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날리고 생존자 450명의 계좌를 추적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리고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중대재해가 노동자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운동의 과정이자 결과물이었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근간에서부터 허물고 무력화 시켜왔음.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시민 여론과 정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 그 결과 법 시행 이후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예산 등에 투자 확대, 노동자/작업자 의견 수렴, 작업중지권 확대 등 진행되었던 흐름이 중단되고 노동자/작업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확대되고 2024년 1월 50인(역) 미만까지 법 적용을 앞두고 정권과 경영계 차원의 개악 공세는 더욱 본격화 될 것임
-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매년 2,400명의 노동자 죽음이 행렬이 반복되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킨다면 노동자 죽음의 범인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자신이라는 노동시민사회와 산재피해 유가족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

4. 기자회견문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노동자 사망정보 비공개, 살인기업 비호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죽음의 범인이다

매년 노동자 2천400명의 죽음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며 절박하게 외쳤던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죽어가는 노동자의 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산재유가족과 동료 노동자, 노동·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성과가 윤석열 대통령 재임 1년여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일고의 고민과 공감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무너져 내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유족에게 머리를 숙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후보는 당선과 함께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국제캠페인 구호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인 노동조합에 노골적으로 적대와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지, 공공연한 기업 비호, 기업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법과 원칙은 후보자 시절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2021년 12월 안양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는 기업에 산재사망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다 굳이 해당 현장을 방문해 사망한 노동자의 부주의와 과실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을 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조롱하고 기업이익을 우선시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법과 원칙을 거둬들이고 있는 시기, 면죄부를 받은 기업은 안전에 비용을 투자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노동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감소추세였던 산재사망자 수는 2021년보다 무려 143명이나 늘어 2022년 2천223명을 기록했다. 더욱이 늘어난 산재사망자 수를 발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 감소에 효과가 없다며 매우 안일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1년간 기업 경영 활동 위축, 기업 피해 최소화 운운하며 경영계와 대화만 고집한 결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집행유예, 2호 판결이 징역 1년 선고에 그쳐,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청난 수사는커녕 과거와 다르지 않은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폄하와 조롱은 이번 살인기업선정식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고용노동부의 산재사고사망 발생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하는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행되었다. 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계속해서 말해왔으나 그 말을 무시한 결과 7명의 노동자를 사망한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영업정지 조차 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 4건의 사고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디엘이앤씨는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의 비호 속에서 본인들의 살인행위를 숨길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반복될 기업살인의 살인면허를 발부받았다.

우리는 지난 2006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창하며,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책임과 엄벌을 요구해 왔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산재사망자의 이야기를 알리고 그 죽음을 방조하고 만들어 낸 기업들의 실명을 공개해 왔다. 그것이 매년 노동자 2천400명이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꿀 최소한의 수단이자 허망하게 동료와 가족과 친구를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를 살인한 기업의 이름조차 시민들이 알 수 없다. 지난 1년 윤석열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이다. 살인기업을 비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죽음의 범인이다.

2023년 4월 27일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5. 발언문

여는 발언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여는 발언②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발언①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 다발 기업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기업의 명예보다 우선합니다.

그간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산재사망 다발 기업 명단을 발표한 것은 그것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변화해야 합니다. 기업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열심히 하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강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으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인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사망이 많은 기업을 공표하여 대중에게 지탄을 받게 하면 기업 이미지를 걱정하는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다른 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작동해야 기업이라는 거대 조직을 그나마 ‘조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쩌면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재사망 다발 기업 명단 공개를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는 기업을 봐주기 심상이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약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중의 압력으로 기업을 바꾸어 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면 좋은 이들은 기업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명 공개가 기업 법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말이 안 됩니다.

산재사망 다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표하는 기업명과 우리가 요구하는 기업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표하는 자료는 하청기업의 산재사망을 원청에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산재사망이 일어난 기업명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피의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입니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경영책임자라고 하여 다 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명을 공개한다고 하여 피의자가 특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기업명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을 비호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명예와 기업 경영책임자의 방어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발언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발언③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아들 용균이를 사회적 타살로 잃은지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런 끔찍한 아픔 막아 보겠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기위해 일하러 간 노동자들이 날마다 여섯명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함이 이제는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기업이 더 이상 노동자들 죽여가며 일시키지 말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죽음이 줄어들지 않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시민 대부분이 노동자인데도 노동자가 노동자를 대하는 시선이 곱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대다수가 수준 낮은 후진국형 무지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막을 돈이나 힘을 쓸 여건도 충분함에도 어째서 아직도 생명안전에는 등한시하고 이윤에만 급급한지.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왜 이토록 소홀히 대하는지 진정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여기 있는 윤석열정부에게 따져 묻고자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내 가족 내 이웃에 목숨을 희생시켜가며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저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고도 어떠한 체면이나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 뻔뻔스러운 내 나라가 국가적 망신살이고 파렴치범이라 생각합니다.

사고난지 4년이 지났지만 용균이 재판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난2월9일 항소심에서 처벌받아야할 원청사장 김병숙과 법인을 위협한지 잘 몰랐다는 이유로 살인죄는 인정하나 처벌할 수 없다는 괴변으로 무죄 판결한 고등법원이 저는 죽임을 허가해준 살인공범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한국제강 대표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해 첫 번째로 예상보다 적지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슬프면서도 반겨야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지극히 당연한 취지로 만든 법을 너무나 어렵사리 만들어놓고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심적으로 무척 힘이 들었는데 이제라도 재판정이 사람 살리는 길에 함께해주는 것 같아 다행스러워 고맙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 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두성산업의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당장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두성산업 파렴치범을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기각하고 재판이 엄중처벌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후진국형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데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발언④ 쿠팡 과로사 노동자 고 장덕준님 어머니 박미숙

저는 2020년 10월 쿠팡철곡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과로로 사망한 장덕준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27세 청년이었던 아들의 시간이 멈추고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멈추어 버린 아들의 시간과 같이 남은 가족의 시간도 함께 멈추어 버렸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약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함께 나누던 이야기도 아들의 죽음으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 입관을 기다리던 아들의 얼굴을 꿈속에서 마주하고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껴매진 아들의 얼굴은 그대로 가슴에 박혀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잊혀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희망을 품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지만,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남아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은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들이 살았을 때 이런 고통을 알았었더라면! 20대 건강한 아들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었더라면, 일을 하면 힘들고 피곤한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그만두게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와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긴 시간 일을 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당시 27세였고 쿠팡철곡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1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시에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평균 58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도 영화도 다음날 일을 위해 포기하며 버렸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삶도 장시간의 노동으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젊고 건강한 아들은 주 58시간의 노동으로 1년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아들의 나약함으로, 그런 나약한 아들을 둔 부모의 책임으로 남지 않게 노동자가 과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동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는 덕준이와 같은 죽음이, 저희 가족과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장덕준의 엄마 박미숙